「2018년 1월 20일 시행」

제24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응시번호	
성　　명	

문제책형
A

【인문사회계열 : 선택과목】

선택과목 유형	선택과목1	선택과목2	선택과목 표기 (○)
1	행정학	민법총칙	
2	행정학	형사소송법	
3	행정학	경제학	
4	행정학	소방학개론	
5	민법총칙	형사소송법	
6	민법총칙	경제학	
7	민법총칙	소방학개론	
8	형사소송법	경제학	
9	형사소송법	소방학개론	
10	경제학	소방학개론	

※ 주의사항

1. 원서접수 시 선택한(응시표에 선택과목 표시) 선택과목1, 선택과목2와 문제지의 선택과목1, 선택과목2 및 답안지의 선택과목1, 선택과목2가 동일하여야 합니다.
2. 답안지는 원서접수 시 선택한 선택과목 순서대로 채점됩니다.

중앙소방학교
NATIONAL FIRE SERVICE ACADEMY

【 행정학 】

1. 전통적인 관료제와 비교해 애드호크라시(adhocracy)의 상대적인 특성이 아닌 것은?
① 권한은 구성원이 지닌 직위보다 각자가 보유한 전문성으로부터 나온다.
② 수평적 분화와 분권화가 강한 반면, 수직적 분화와 공식성은 약한 편이다.
③ 문제해결을 위한 한시적 조직으로 목표가 달성되면 해체되는 경우가 많다.
④ 전문인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업무의 이질성이 높은 편이다.
⑤ 현장 중심의 활동을 수행하기 때문에 행정 지원부서의 규모가 큰 편이다.

2. 우리나라의 시보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보임용은 면제될 수 있다.
② 시보공무원은 직권면직이 가능하다.
③ 감봉처분 기간은 시보기간에 산입된다.
④ 시보기간은 공무원 경력에 포함된다.
⑤ 시보제도는 선발절차・도구의 하나이다.

3.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동일직무에 대해서 동일보수를 지급하는 직무급 체계의 확립에 기여한다.
② 공무원의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이나 잠재력을 중시하는 직업공무원제 수립에 기여한다.
③ 직무의 내용, 성격, 자격요건 등에 따라 합리적인 인사가 이루어진다.
④ 직무의 내용이나 수준을 명확하게 정의함으로써 직위 간의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명확하다.
⑤ 동일직렬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행정의 전문화에 기여한다.

4. 행정학의 접근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제도주의(New Institutionalism)는 국가별 다양한 행정이나 정책의 특성을 제도적 차이로 설명한다.
② 체제론(System Theory)은 행정현상의 급진적인 변화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③ 행태론(Behavioralism)은 인간 행태에 규칙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④ 행태론이 객관주의적 접근방법이라면 현상학(Phenomenology)은 주관주의적 접근방법에 해당한다.
⑤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은 사회현실의 객관성에 기반한 행정의 보편적 법칙성을 강조한다.

5. 공공선택론에서 주장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는 ‘공유재의 비극’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재를 생산・공급함에 있어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반영해야 한다.
② 정부의 권위적이고 독점적인 공공재의 생산・공급은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궁극적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③ 정부와 시민을 각각 공급자와 소비자로 간주하고, 행정 및 정치를 이들 간에 이루어지는 재화의 거래를 위한 장치로 이해한다.
④ 정부실패의 개념을 제시함으로써 신공공관리론(NPM)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⑤ 자기중심적이며 이기적인 경제인을 가정하는 합리적 선택이론을 공공부문에 적용한다.

6. 정치·행정이원론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을 정치중립적이며 비권력적인 관리 현상으로 이해한다.
② 미국의 펜들턴법(Pendleton Civil Service Reform Act)과 맥락을 같이한다.
③ 과학적 관리법에 기반한 행태주의적 관점을 견지한다.
④ 행정의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 개혁운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하였다.
⑤ 행정학이 독립된 학문분야로 등장하였다.

7. 준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해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③ 국회의 사전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④ 우리나라는 정부수립과 함께 준예산제도를 계속 채택해오고 있다.
⑤ 예산 불성립에 따른 임시예산이다.

8. 우리나라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행정 통제체제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② 행정의 잘못에 대하여 제기되는 진정·고발·청원
③ 국회에서 특별한 사안에 대하여 의결·임명하는 옴부즈만(Ombudsman)
④ 국가기관 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행하는 헌법재판소
⑤ 명령·규칙에 대한 심사권을 행사하는 법원

9. 우리나라의 자치입법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자치법규는 주민에 대하여 벌칙을 정할 수 없다.
③ 자치입법권에 입각한 자치법규로는 조례, 규칙, 교육규칙 등이 있다.
④ 조례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제정된다.
⑤ 규칙의 제정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10. 우리나라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는 주민감사청구제도와 주민 소송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② 주민은 조례의 제정과 개폐를 지방의회에 발의 또는 청구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長) 및 선출직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소환의 대상이 된다.
④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만 부여되어 있다.
⑤ 주민은 지방예산의 편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11. 대표관료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역차별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②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데 의의가 있다.
③ 출신 집단의 가치와 이익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공무원 간의 견제와 내적 통제가 강화된다.
④ 행정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강화한다.
⑤ 관료들의 국민에 대한 대표성을 높이고 민주적 서비스를 촉진한다.

12.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의무가 아닌 것은?
① 종교 중립의 의무
② 선물 신고의 의무
③ 비밀 엄수의 의무
④ 복종의 의무
⑤ 품위 유지의 의무

13. 정책결정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합리모형(Rational Model)은 정책결정에서 인간의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정치적 현실의 역동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② 만족모형(Satisficing Model)은 제한된 합리성을 중시하며 정책결정자의 주관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에 근거한다.
③ 점증모형(Incremental Model)에 따르면 정책은 이해관계자들의 타협과 조정의 산물이다.
④ 최적모형(Optimal Model)은 합리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모형으로서 체제론적 입장을 배격한다.
⑤ 혼합주사모형(Mixed-Scanning Model)은 정책결정을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으로 구분한다.

14. 비교행정론의 태동과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행정의 과학화를 위한 노력
② 비교행정연구회(CAG)의 활동
③ 다양한 문화와 국가에 적용 가능한 행정이론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
④ 행정학의 처방적 역할에 대한 요구
⑤ 신생국 원조사업에 대한 학자들의 참여

15. 계획예산제도(PPB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의사결정의 집권화보다는 분권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② 목표설정은 가치판단적인 것이기 때문에 계량화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③ 국가목표를 실현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을 탐색한다.
④ 국가목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⑤ 예산부서와 예산담당자의 분석적 능력이 요구된다.

16.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배정제도
② 국고채무부담행위
③ 추가경정예산
④ 계속비와 예비비
⑤ 이용과 전용

17. 공공부문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유권자의 요구
② 집권정당의 성향
③ 국가 발전의 정도
④ 정치이념
⑤ 정부형태

18. 「지방자치법」상 사무배분 혹은 행정에 관한 특례의 대상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자치구
② 제주특별자치도
③ 인구 50만 이상의 시
④ 서울특별시
⑤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

19. 버먼(Berman)은 정책집행을 정형적 집행(programmed implementation)과 적응적 집행(adaptive implementation)으로 구분하였는데, 다음 중 적응적 집행에 비해 정형적 집행의 상대적 특징으로 옳은 것은?
① 정책상황은 비구조화된 상태이다.
② 정책목표의 수정이 필요하다.
③ 관련자의 참여필요성이 낮다.
④ 집행자의 재량은 광범위하다.
⑤ 정책에 대한 성과평가는 부차적 성격을 지닌다.

20. 동기부여이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앨더퍼(Alderfer)의 ERG이론은 상위욕구 충족이 좌절될 경우 하위욕구가 중요한 동기유발 요소가 된다고 주장한다.
② 브룸(Vroom)의 기대이론에 따르면, 보상은 개인 선호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③ 보수체계는 허츠버그(Herzberg)의 2요인 이론에서 동기요인에 해당한다.
④ 로크(Locke)의 목표설정이론은 목표의 구체성에 따라 직무성과가 달라진다고 본다.
⑤ 매슬로(Maslow)의 욕구단계이론에서 생리적 욕구와 안전욕구는 ERG이론의 존재욕구와 유사하다.

21. 개방형 직위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일반행정가 중심의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기여한다.
② 부처중심주의의 폐쇄적인 인력 운영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입되었다.
③ 공직 내·외의 공개경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모직위제와 동일하다.
④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분보장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⑤ 일반직과 특정직에만 적용되고 별정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2. 행정과 경영의 유사점이 아닌 것은?
① 대외적 권력성을 갖는다.
② 관료제적 성격을 지닌다.
③ 관리기술적 속성을 지닌다.
④ 집단적 협동행위이다.
⑤ 개방체제로 운영된다.

23. 정책과정의 권력모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다원주의론은 권력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분산되어 있다고 본다.
② 신엘리트이론은 사회의 지배 엘리트가 허용하는 문제만이 정책의제로 형성된다고 본다.
③ 무의사결정은 정책결정뿐만 아니라 정책집행과정에서도 발생한다.
④ 다원주의론은 이익집단들 간의 관계를 상호 보완적인 상태로 본다.
⑤ 다원주의론 시각에서 정부는 갈등적 이익을 조정하는 심판자 역할을 한다.

24. 정책네트워크(policy network)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식적인 정책참여자들 간의 상호 논의가 정책과정과 산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착안되었다.
② 정책공동체는 이슈네트워크에 비해 참여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③ 이슈네트워크는 이익집단, 행정조직, 의회 위원회가 동맹을 형성하여 정책과정을 안정적으로 지배한다고 본다.
④ 정책공동체는 급격한 정책변동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⑤ 하위정부모형은 내부균열과 외부세력의 진입으로 형성된 유동적이고 불안정한 관계를 강조한다.

25. 매트릭스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능부서장과 사업부서장이 자원배분권을 공유한다.

② 조직 구성원 간의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에 기여한다.

③ 명령 및 보고체계가 다원화되어 있다.

④ 이중구조를 통한 인적자원의 경제적 활용을 도모한다.

⑤ 조직의 신축성 확보를 위해 대규모 기업에서 많이 채택한다.

【 민법총칙 】

1.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② 「민법」 제1조에서 법원으로 인정하는 법률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정·공포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의미한다.

③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강행되기에 이른 것으로, 법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에 불과한 사실인 관습과 구별된다.

④ 이미 관습법으로 승인된 사회생활규범이라고 해도 그러한 관습법을 적용해야 할 시점에 있어서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러한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

⑤ 국가 간의 조약도 민사에 관한 것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2.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추인이 인정되는 예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이의를 보류한 것은 아님을 전제로 함)

① 취소권자 甲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②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부터 발생한 채권에 대해 취소권자 甲이 상대방 乙의 이행을 수령한 경우

③ 취소권자 甲의 상대방인 乙이 이행의 청구를 한 경우

④ 취소권자 甲이 채권자로서 그 담보의 제공을 받는 경우

⑤ 취소권자 甲이 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3.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단 유효하지만, 취소를 하였을 때에 비로소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②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③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얻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④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4. 성년후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이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특정후견의 종료심판을 한다.

③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④ 피성년후견인이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성년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

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5. 「민법」상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②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③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

④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는 법인의 채무를 완제한 후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3주간 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6.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경매에 있어서 경매부동산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게 경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② 피해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고, 상대방이 그러한 피해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악의를 가지고 법률행위를 하였어야 한다.

③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하지만, 이것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는 않는다.

④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는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로 하여금 불공정성을 소송으로 다투지 못하도록 하는 부제소(不提訴) 합의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7. 과실(果實)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② 천연과실은 그 원물을 점유한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③ 주식배당금과 같은 권리의 과실은 민법상 천연과실이 될 수 없다.

④ 법정과실은 당사자가 다르게 약정하지 않는 한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⑤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물건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물건의 과실에 준한다.

8.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사 기타 대표자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해야 한다.

② 행위의 외형상 이사 기타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법인의 정관 목적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니라면,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대표권이 없는 이사는 법인의 기관이기는 하지만, 그 이사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할 경우, 이사 기타 대표자는 자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⑤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9. 법률행위 내용의 사회적 타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형사사건에 관하여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성공보수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② 어느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④ 지방자치단체가 골프장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기부금을 지급받기로 한 증여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⑤ 사회적 타당성을 잃은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그 무효로써 그 법률행위의 유효를 믿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0.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법률행위의 무효는 법률행위가 성립된 것을 전제로 하는 점에서 법률행위로서의 외형적인 모습을 갖추지 못한 경우인 법률행위의 불성립과 구분된다.

②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③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의 침해로 보이는 위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으나,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여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11.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지만,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② 착오의 존재 및 그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라는 점은 표의자가 증명책임을 진다.

③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가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기만 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④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증명책임은 표의자로 하여금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못하게 하려는 상대방이 부담한다.

⑤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출연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므로, 출연자는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12. 甲은 乙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음이 없이 자신이 乙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면서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丙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乙에게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으며, 乙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② 丙이 행한 추인 여부 확답의 최고에 응하여 乙이 계약을 추인하였으면, 그 추인은 원칙적으로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③ 乙이 甲에게 추인하는 경우, 丙이 추인 있었음을 알지 못한 때에는 丙에 대하여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④ 계약 당시에 甲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지 못한 丙은 乙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乙이나 甲에 대하여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⑤ 甲에게 대리권 없음을 丙이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丙은 甲을 상대로 하여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3.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청구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③ 시효의 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만 효력이 있다.
④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기간 내에 가집행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은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⑤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되기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14.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그의 대리권 범위 내의 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②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③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부적임이나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④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⑤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15. 한정후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가정법원에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④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⑤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16.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사기가 성립하려면 사기자가 표의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와 착오에 기하여 어떤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② 신의칙 및 거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은 기망행위라야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

③ 표의자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표의자에게 사기를 행한 경우, 상대방이 제3자의 사기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④ 상대방 대리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표의자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 표의자는 상대방이 이를 알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표의자가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여야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7. 「민법」 제126조에서 정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증권회사로부터 위임받은 고객의 유치, 투자상담 및 권유, 위탁매매약정실적의 제고 등의 업무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기본대리권으로 하여서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②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규정은 임의대리와는 달리 법정대리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다.

③ 기본대리권이 등기신청행위라 할지라도 표현대리인이 그 권한을 넘어 대물변제라는 사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된다.

④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6조의 규정에서 제3자라 함은 당해 표현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된 자만을 지칭하는 것이다.

⑤ 「민법」 제126조에서 정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행위로 인정된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

18. 甲은 2015년 8월 초 원양어선을 타고 태평양에서 조업하던 중, 그 선박이 침몰하여 같은 해 8월 20일 실종되었다. 甲의 배우자 乙은 2017년 1월 5일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임)

① 甲이 출항하기 전에 선임된 재산관리인에 의하여 실종선고 청구 당시까지 적절한 재산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더라도, 乙은 甲의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② 甲은 乙이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한 때로부터 1년의 기간이 만료한 때부터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③ 甲에 대한 실종선고가 있고 난 후에는 甲이 실종기간 만료한 때와 다른 시기에 사망하였다는 확증이 있더라도, 곧 그 실종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④ 甲에 대한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甲의 재산은 乙에게 상속되고 乙은 재혼할 수 있다.

⑤ 실종선고를 받은 甲이 생환하여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甲의 생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상속받은 乙은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해야 한다.

19.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채권자가 채무의 기한유예는 해주었으나 유예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변제유예의 의사를 표시한 때로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② 채권이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바뀐 때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③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④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채권의 이행기부터 진행한다.

⑤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채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20. 甲 사단법인(이하 '甲 법인')에는 A, B, C 3인의 이사가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A, B, C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甲 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② A, B, C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않은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甲 법인을 위한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甲 법인과 A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은 A를 대신할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④ 甲 법인의 정관에서 A, B, C 3인이 공동으로 대표행위를 하도록 정해져 있는 경우, 이러한 사항을 등기하지 않으면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하지 못한다.

⑤ A, B, C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사의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21.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지지 아니한 대리인이라 하더라도 보존행위, 이용행위, 개량행위는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②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도 허용된다.

④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이행에 대해서는 쌍방대리가 허용된다.

⑤ 부동산의 소유자를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잔대금도 수령할 권한이 있다.

22.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 인 때에는 그 조건만이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로 된다.

②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상속·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③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인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④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된 것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⑤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한 그 의사에 의한다.

23. 통정허위표시에 있어서 제3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허위표시의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에 의해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를 제외한 누구에 대하여서도 허위표시는 무효이다.

② 허위표시로 채권이 양도된 후, 양수인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그 채권양도가 허위표시로 무효이더라도 양수인의 채권자는 제3자에 해당한다.

③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되므로,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그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④ 허위표시에서 제3자가 당해 허위표시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선의이며 무과실이어야 한다.

⑤ 제3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경우, 제3자의 선의 여부에 대하여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4.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 중 취소할 수 있는 것은?

① 대리행위

② 부담 없는 증여를 받는 행위

③ 경제적으로 유리한 매매계약의 체결행위

④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한 행위

⑤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범위를 정하여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

25. 신의칙 내지 권리남용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신의칙은 채권관계뿐만 아니라 물권관계나 가족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

② 계약체결 전 교섭단계에서도 당사자들은 신의칙에 기하여 일정한 주의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③ 신의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④ 권리행사가 남용으로 인정되면 권리행사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며, 남용으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⑤ 강행규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스스로 그러한 행위를 한 당사자가 그 후에 자신의 행위가 강행규정에 위반됨을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 형사소송법 】

1.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항소하였으나 검사의 항소가 기각된 경우에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② 파기환송 또는 파기이송사건의 경우에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③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선고된 추징을 몰수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④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변경하는 경우, 부정기형의 장기를 기준으로 하여 형의 경중을 판단하여야 한다.
⑤ 벌금형이 제1심보다 감경되었다면, 비록 그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이 제1심보다 더 길어졌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형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의자와 피고인의 동거인이나 고용주도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체포·구속할 때의 사정만을 기준으로 하여 그 적부를 판단한다.
③ 법원의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항고하지 못한다.
④ 체포·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된 피의자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구속할 수 없다.
⑤ 체포·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석방결정은 심사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효력이 있다.

3. 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 반드시 체포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수사기관이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피의자를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③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 및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석방한 경우,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다액 7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은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만 그 체포가 허용된다.

4. 약식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약식명령의 청구에도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되므로, 공소장부본을 첨부해서는 아니된다.
② 약식절차에는 전문법칙과 자백배제법칙 및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약식절차에서도 무죄나 면소 혹은 관할위반의 재판을 할 수 있다.
④ 약식명령은 그것이 확정되더라도 재심이나 비상상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⑤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약식명령의 송달 시가 아니라, 발령 시까지의 범죄사실에 미친다.

5. 구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법원에 의한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②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의 신청 유무를 불문하고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③ 구속영장은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뿐만 아니라, 그 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에도 미친다.

④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 검사는 항고할 수 있다.

⑤ 법원은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6.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되지 않으면, 압수가 허용되지 않는다.

② 이미 압수·수색을 행한 후라면, 그 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

③ 압수의 목적물이 증거물인 경우에는 대가보관을 할 수 없고, 환부의 대상도 될 수 없다.

④ 검사가 사건을 불기소처분하는 경우, 압수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압수자나 제출인 이외의 누구에게도 환부할 수 없다.

⑤ 압수물을 환부받을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수사기관의 환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7. 함정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②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③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면,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④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방법으로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⑤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피의자를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 피의자를 체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8. 다음 중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몰수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②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사실

③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의 유무

④ 자백의 임의성의 기초가 되는 사실

⑤ 증거의 증명력을 감쇄시키는 보조사실

9. 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보석허가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항고할 수 없다.

②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보석이 허가되지 않는다.

③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보석이 허가되지 않는다.

④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이 다시 구속된 경우, 그 피고인에 대한 보석허가결정이 위법인 것은 아니다.

⑤ 법원은 필요적 보석 이외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임의적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10. 법원의 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토지관할을 위반하였더라도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관할위반을 선고하지 못하고, 그 관할위반의 신청은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하여야 한다.

②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하여야 하므로, 나중에 공소를 받은 법원의 판결이 먼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확정판결은 무효이다.

③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이 직권으로 그 관련사건을 병합심리한다.

④ 관할법원이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경우, 검사와 피고인은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의 이전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는 그 사건을 지체 없이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이송하여야 한다.

11. 증인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은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도 당연히 증인적격을 갖는다.

② 증언거부 사유가 있음에도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의 장애가 초래된 경우, 위증을 하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선서무능력자가 선서를 하고 증언하더라도 그 증언은 무효이다.

④ 다툼이 없는 명백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신문에서도 유도신문이 허용되지 않는다.

⑤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히 진술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을 퇴정시켜 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할 수 있다.

12. 공소장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간이공판절차에서는 공소장의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②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없는 범죄사실이라도 그 예비적·택일적 추가변경은 허용된다.

③ 공소장변경허가결정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법원은 그 허가결정을 스스로 취소할 수 없다.

④ 미수의 공소사실을 예비·음모로 변경하는 때에는 공소장변경을 요한다.

⑤ 포괄일죄로 기소된 사안을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실체적 경합으로 인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13. 공소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제기는 다른 공범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②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는 그 효력이 전부에 미친다.

③ 동일사건이 동일법원에 이중으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결정을 내려야 한다.

④ 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⑤ 공소장의 제출이 없어 공소제기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볼 경우, 추후 공소장이 법원에 제출되었다면 그 제출 시에 공소제기가 있다고 볼 수 있다.

14.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당해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

② 공판준비기일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하며, 공개시 절차의 진행에 방해될 우려가 없는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③ 공판준비기일에 검사 및 변호인은 필요적으로 출석하여야 하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지만,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 없이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

④ 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허가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증거채택 여부의 결정을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5. 공소권의 남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소추재량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②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

③ 공소제기된 피고인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검사의 1차 무혐의결정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고소인이 항고 등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약 3년이 지난 후에 다시 피고인을 동일한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검사가 새로이 수사를 재기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이는 공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④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⑤ 어떤 사람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그 공소가 제기된 사람과 동일하거나 다소 중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기소된 사람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공소의 제기가 평등권 내지 조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공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16. 긴급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 따른 압수·수색 또는 검증은 긴급체포된 자가 체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을 대상으로 할 수 없다.

② 피의자가 필로폰을 투약한다는 제보를 받은 사법경찰관이 제보의 정확성을 사전에 확인한 후에 제보자를 불러 조사하기 위하여 피의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였다가, 그곳에서 피의자를 발견하고 그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나오라고 하였으나 응하지 않자 피의자 집의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위법한 수사에 해당한다.

③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위법하게 긴급체포한 후에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17.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미수범의 범죄행위는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는 때에 종료하고, 그때부터 미수범의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② 피고인의 신병이 확보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소제기가 부적법한 것은 아니고, 공소가 제기되면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③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서 말하는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된다.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및 지원을 받은 경우, 공소시효는 이 법률에 의한 보호 또는 지원을 최종적으로 받은 때로부터 진행한다.

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에서 말하는 '공범'에는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18. 현행범인의 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②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

③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재량의 여지가 없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체포 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이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지체 없이 압수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⑤ 현행범인 체포 현장이나 범죄 장소에서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19. 자백 및 자백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작성한 업무용 수첩에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는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시인하는 자백에 해당한다.

② 자백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피고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③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하게 된 사유들과 자백 사이에 인과관계가 요구되지 않는다.

④ 피고인의 자백이 경한 죄의 소추 등의 이익과 교환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자백하겠다' 는 단순한 약속에 의한 경우라도 그 임의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⑤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자백은 피고인들 상호 간에 이해관계가 상반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20. 자백의 보강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위조신분증을 제시·행사한 사실을 자백한 경우, 그 위조신분증의 현존은 그 자백을 보강하는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② 전문법칙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는 전문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③ 공판정에서 행한 피고인의 자백에 대해서는 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⑤ 필로폰 매수대금을 송금한 사실에 대한 증거는 필로폰 매수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필로폰 투약행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21. 전문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어떤 진술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될 때에는 그 진술이 전문증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때에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②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사람의 진술을 녹음한 녹음파일은 실질에 있어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사람이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크게 다를 바 없으므로, 그 녹음파일에 담긴 진술 내용의 진실성이 증명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③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서 규정한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와 제2호에서 열거된 공권적 증명문서 및 업무상 통상문서에 준하여 '굳이 반대신문의 기회부여 여부가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 고도의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있는 문서' 를 의미한다.

④ 피고인이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된 수표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⑤ 법원이 증인이 소재불명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부득이 증인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검사가 입증한 경우이어야 한다.

22.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그로 인해 수집된 증거는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②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기소 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곧 그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③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원진술자인 종전 증인이 다시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면서 그 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고 피고인 측에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이 없다.

④ 검사가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소환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한 다음 그로 하여금 본인의 증언 내용을 번복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법원에 제출한 경우, 그 진술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⑤ 검사가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음으로 인해 적법한 시간 내에 피의자를 석방하였으나,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석방통지를 하여야 한다는 법규정을 위배한 경우, 그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23. 재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상소기각판결과는 달리, 공소기각판결은 그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말하는 ‘형의 면제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고 할 때의 ‘형의 면제’에는 형의 필요적 면제뿐만 아니라 임의적 면제도 포함된다.

③ 법률 조항 자체는 그대로 둔 채 그 법률 조항에 관한 특정한 내용의 해석·적용만을 위헌으로 선언하는 한정위헌결정은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④ 제1심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항소기각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⑤ 재심법원은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재심판결 전에 사망하더라도 공소기각결정을 할 수 없고 실체판결을 하여야 한다.

24. 변호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원심법원에서의 변호인선임은 상소심의 파기환송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②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위해 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한 경우, 그 선정의 효력은 영장의 발부 여부와 무관하게 제1심까지 지속된다.

③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 항소심은 위법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의 심리결과에 기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④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서는 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 이외에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⑤ 변호인은 피고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25. 상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선고를 하는 경우, 판결의 확정 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가납재판의 집행은 상소에 의해 정지되지 않는다.

②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피고인의 동의가 없다면 상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상소취하에 대한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구술 동의는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③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전체에 대하여 상소하였는데,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소만 이유 있는 때에도 상소심 법원은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야 한다.

④ 검사가 재판의 주문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재판의 이유만을 다투기 위하여 상소하는 것도 허용된다.

⑤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대하여는 본안의 재판에 관하여 상소하는 경우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다.

【 경제학 】

1. 공급의 가격탄력성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① 공급자 간 경쟁이 심할수록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작다.

②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상품일수록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작다.

③ 가격에 대응할 수 있는 기간이 길수록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크다.

④ 생산에 절대 기간이 필요한 농산물은 탄력적이고, 공산품은 비탄력적이다.

⑤ 생산설비 규모가 클수록, 생산요소 간의 대체 가능성이 작을수록,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크다.

2.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를 의미한다.

② 주부와 학생 등은 실업자로 구분한다.

③ 실업률은 실업자 수를 취업자 수와 실업자 수의 합으로 나눈 것이다.

④ 경제활동참가율은 취업자 수를 경제활동인구로 나눈 것이다.

⑤ 경제활동인구에는 주부와 학생도 포함된다.

3. 본원통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본원통화는 중앙은행의 자산이다.

② 중앙은행의 정부에 대한 대출이 증가하면 본원통화가 증가한다.

③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조작 등을 통해 유가증권을 매각하면 본원통화가 증가한다.

④ 수출이 증가하면 본원통화는 감소한다.

⑤ 예금은행이 중앙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으면 본원통화는 감소한다.

4. 주어진 30시간의 노동을 사용하여 A국은 휴대폰 30단위와 냉장고 10단위를 생산할 수 있는 반면, B국은 휴대폰 10단위와 냉장고 5단위를 생산할 수 있다. 두 나라가 교역을 통해 서로 이득을 볼 수 없는 가격은?

① 휴대폰 40단위당 냉장고 15단위

② 휴대폰 70단위당 냉장고 24단위

③ 휴대폰 50단위당 냉장고 23단위

④ 휴대폰 30단위당 냉장고 14단위

⑤ 휴대폰 60단위당 냉장고 18단위

5. 독점적 경쟁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다수의 생산자가 존재하고 진입과 퇴거가 자유롭다.

② 각 기업은 서로 차별화된 상품을 생산한다.

③ 광고경쟁과 같은 비가격경쟁에 자원을 소모하므로 생산비가 높아지는 문제점도 존재한다.

④ 독점력이 강한 기업은 장기에도 양(+)의 이윤을 얻게 된다.

⑤ 각 기업이 부과하는 가격은 서로 다르게 된다.

6. 정부는 수입 원유에 부과되고 있는 관세를 더 이상 부과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내 원유 가격은 하락한다.

② 국내 원유 공급량은 감소한다.

③ 국내 소비자 잉여는 증가한다.

④ 국내 생산자 잉여는 감소한다.

⑤ 국내 총잉여는 감소한다.

7. 어떤 재화에 대한 시장수요 함수가 $P=40-2Q$이고 한계비용은 20이다. 동일한 재화를 생산하는 과점기업들이 공동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서로 담합한다면, 이 재화의 가격은?

① 0 ② 10 ③ 20 ④ 30 ⑤ 40

8. A, B, C 세 가지 상품묶음을 가정하자. A와 B는 동일한 무차별 곡선상에 있는 점들이고 두 상품 간의 한계대체율이 체감한다고 할 때, 이 상품묶음들 간의 선호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품	양말	셔츠
A	10	7
B	20	5
C	15	6

① C는 A와 B보다 선호된다.
② A와 B는 C보다 선호된다.
③ A, B, C는 동일한 무차별 곡선상에 있다.
④ B는 C보다 선호되고 C는 A보다 선호된다.
⑤ 주어진 정보로는 상품묶음들 간의 선호를 결정할 수 없다.

9. F기업은 청바지 염색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청바지 1개를 염색하는 데 소요되는 한계비용은 10 + Q이다. 그러나 공장에서 유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여 사회적인 한계비용은 20 + Q이다. F기업이 직면하는 염색 청바지의 수요곡선은 Q = 40 - P이다. F기업이 염색하는 청바지 개수와 사회적으로 최적인 염색 청바지 개수는 각각 얼마인가?

① 10, 10 ② 10, 15 ③ 10, 20
④ 15, 5 ⑤ 15, 10

10. 미국 달러화가 기준 통화인 경우에, 엔-달러 균형실질환율을 하락시키는 요인들을 묶은 것으로 옳은 것은?

① 일본 정부의 조세 삭감, 미국의 정부지출 증가
② 일본 정부의 조세 삭감, 미국의 투자세액공제 확대
③ 미국의 정부지출 증가, 미국의 투자세액공제 확대
④ 일본 정부의 조세 삭감, 미국의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수입관세율 인하
⑤ 미국의 투자세액공제 확대, 미국의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수입관세율 인하

11. 다음 <표>와 같은 조건에서 A, B 두 나라의 비교우위론에 의한 무역특화 과정과 무역국의 이익을 기회비용으로 살펴본 경우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표> 재화 1단위당 생산비

국가 \ 품명	쌀 1 kg	육류 1 kg
A국	10달러	12달러
B국	20달러	15달러

① A국의 쌀 1 kg의 기회비용은 육류 2 kg이다.
② B국의 쌀 1 kg의 기회비용은 육류 약 1.33 kg이다.
③ A국의 육류 1 kg의 기회비용은 쌀 2 kg이다.
④ B국의 육류 1 kg의 기회비용은 쌀 1.25 kg이다.
⑤ A, B 양국은 기회비용이 큰 것을 특화해야 이익이다.

12. A시장에서 (ㄱ), (ㄴ)의 경우일 때 균형 거래량과 균형가격의 변화로 옳은 것은? (단, A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이론을 따른다.)

(ㄱ) 소고기 가격이 하락할 때 삼겹살의 수요 (ㄴ) 임금, 임대료, 이자 등 생산요소 가격이 상승할 때

① 균형거래량은 증가하고 균형가격은 하락한다.
② 균형거래량은 감소하고 균형가격은 상승한다.
③ 균형거래량은 증가하고 균형가격은 상승한다.
④ 균형거래량은 감소하고 균형가격은 하락한다.
⑤ 균형거래량은 감소하고 균형가격은 알 수 없다.

13. 다음 글에서 밑줄 친 ‘이것’의 국제통화제도의 명칭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는) 금 달러 본위제 폐지와 동시에 특별인출권(SDR) 본위제도의 이행과 고정환율제와 변동환율제의 인정이다. 그리고 IMF 신용의 확대 및 이용 조건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것 이후 대부분의 세계 각국은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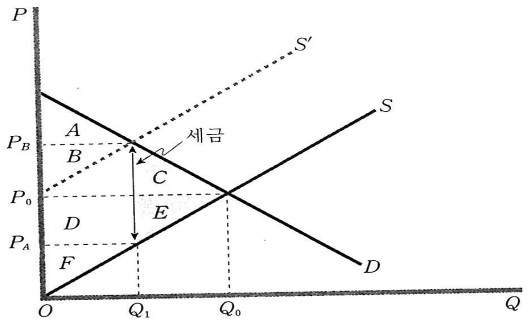
① 금태환 체제
② 킹스턴 체제
③ 플라자 체제
④ 브레튼우즈 체제
⑤ 스미소니언 체제

14. 프리드만의 항상소득가설의 주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정 기간에 취득한 당기소득이다.
② 소비는 주로 항상소득에 의해 결정된다.
③ 임시소득은 대부분 소비되지 않고 저축된다.
④ 장기에는 평균 소비성향과 한계 소비성향이 같다.
⑤ 임시소득이 실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클수록 평균 소비성향은 작아진다.

15. 현대 경제성장 이론의 초석이 된 솔로우 모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케인즈 이론의 동태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② 생산함수의 미시경제학적 분석을 중요시하고 있다.
③ 자본-생산량비율(v) 또는 자본-노동비율(k)이 가변적이다.
④ 자본주의 경제의 안정적 균형성장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⑤ 생산함수는 생산요소 간 대체가 가능한 콥-더글러스 1차 동차생산함수이다.

16. 최고가격제 효과의 장점으로 옳은 것은?
① 상품의 품귀상태가 일어나면 암시장이 형성된다.
② 총잉여의 감소로 사회적인 후생손실이 발생한다.
③ 최고가격 수준에서 상품의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④ 공급자들은 최고가격 수준에서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 상품의 품질을 낮출 수도 있다.
⑤ 외관상 물가가 하향안정화되어 소비자들은 균형가격보다 낮은 가격에서 해당상품 구입이 가능하다.

17. 다음 그래프는 조세부과와 후생손실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세부과로 공급곡선이 S에서 S′ 로 이동, $P_A = P_S$)



① 조세부과 전 시장균형가격은 P_0, 거래량은 Q_0이다.
② 조세부과 전 소비자잉여는 삼각형 A + B + C이다.
③ 조세부과 전 생산자잉여는 삼각형 D + E + F이다.
④ 조세부과로 소비자잉여는 B + C만큼 감소하고, 생산자잉여는 D + E만큼 감소한다.
⑤ 조세가 부과되면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가 감소하는데, 이 감소분이 정부의 조세수입보다 더 크므로 삼각형 A + B만큼의 후생손실이 생긴다.

18.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이 모두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으로 옳은 것은?
① 통화수요가 소득에 의존하지 않는다면 LM 곡선은 수평선이 된다.
② 통화수요가 이자율에 의존하지 않는다면 LM 곡선은 수직선이 된다.
③ 통화수요가 이자율에 극단적으로 민감하다면 LM 곡선은 수평선이 된다.
④ 투자가 이자율에 의존하지 않는다면 IS 곡선은 수직선이 된다.
⑤ 투자가 이자율에 의존하지 않는다면 LM 곡선은 수평선이 된다.

19. 다음은 특정연도의 국민소득계정을 가정한 것이다. GDP를 구한 것으로 옳은 것은?

(ㄱ) 자동차, 냉장고, 가구 등과 같은 내구소비재 : 350
(ㄴ) 의류, 식품, 유류 등 비내구소비재 : 150
(ㄷ) 주택전세, 교통, 보건의료, 교육, 오락 등 서비스 : 500
(ㄹ) 감가상각(=자본소모충당금) : 400
(ㅁ)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 : 200
(ㅂ) 재화와 서비스의 수입 : 300
(ㅅ) 정부 소비지출 : 330
(ㅇ) 순투자(=신투자) : 120
(ㅈ) 정부의 이전 지출 : 300

① 1,450 ② 1,550 ③ 1,650
④ 1,750 ⑤ 1,850

20. 베르트랑(Bertrand) 모형에 의하면 기업 A와 B는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가격을 인하하거나 담합하는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 게임에 대한 보수행렬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이 게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선택 (보수 : 억 원)		기업 B 가격인하	기업 B 가격담합
기업 A	가격인하	(10, 10)	(30, 15)
기업 A	가격담합	(15, 30)	(20, 20)

① 한 개의 우월전략균형이 존재한다.
② 두 개의 우월전략균형이 존재한다.
③ 두 개의 내쉬균형이 존재한다.
④ 두 기업 모두 가격담합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내쉬균형이다.
⑤ 두 기업 모두 가격인하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내쉬균형이다.

21. 국민소득결정 모형에서 한계수입 성향이 감소하면 균형국민소득과 상품수지는 어떻게 변하는가?

Y = C + I + X - M C = 50 + 0.7Y I = 100 X = 50 M = 0.2Y (단, Y : 국민소득, C : 소비, I : 투자, X : 수출, M : 수입)

① 균형국민소득 변화 없음, 상품수지 개선
② 균형국민소득 감소, 상품수지 개선
③ 균형국민소득 감소, 상품수지 악화
④ 균형국민소득 증가, 상품수지 개선
⑤ 균형국민소득 증가, 상품수지 악화

22. 우리나라의 물가가 10% 상승하고 미국의 물가가 5% 상승했다면, 구매력평가설(Purchasing Power Parity Theory)에 따르면 환율은 어떻게 변하는가?
① 원화가 달러에 비해 5% 평가절하된다.
② 원화가 달러에 비해 5% 평가절상된다.
③ 원화가 달러에 비해 15% 평가절하된다.
④ 원화가 달러에 비해 15% 평가절상된다.
⑤ 원화가 달러에 비해 50% 평가절하된다.

23. K주식의 기대수익률은 20%이고 수익률의 표준편차는 32%이다. 무위험자산의 기대수익률이 4%이고, K주식과 무위험자산으로 이루어진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이 14%라면, 이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의 표준편차로 측정되는 리스크는?
① 12% ② 14% ③ 16%
④ 18% ⑤ 20%

24. 김소방은 가치(w)가 100인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이 건물의 가치로 얻는 효용을 표시한 함수는 $U(w) = \frac{1}{2}\sqrt{w}$ 이다. 최근 지진이 발생하여 보험 가입을 고려하고 있으며,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½이고, 지진 발생으로 인한 피해액이 64로 예상된다. 김소방의 공정보험료와 위험 프리미엄은 각각 얼마인가?
① 16, 2 ② 32, 2 ③ 32, 4
④ 50, 3 ⑤ 50, 4

25. 수요독점적인 노동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수요독점기업의 한계요소비용 곡선은 노동공급 곡선 아래쪽에 위치한다.
② 노동공급 곡선과 한계수입생산 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고용량이 결정된다.
③ 완전경쟁적인 노동시장의 경우에 비해 고용량 수준은 감소하지만 임금률 수준은 상승한다.
④ 수요독점기업으로부터 노동공급자로의 소득이전 효과가 발생한다.
⑤ 최저임금제를 적용하는 경우 이론적으로 미숙련 노동자의 고용량이 증가할 수 있다.

【 소방학개론 】

1. 제6류 위험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산화수소는 물과 접촉하면서 심하게 발열한다.
② 불연성 물질이다.
③ 산소를 함유하고 있다.
④ 대표적 성질은 산화성 액체이다.
⑤ 물질의 액체 비중이 1보다 커서 물보다 무겁다.

2. 위험물화재의 특수현상 중 슬롭오버(Slop Over) 현상으로 옳은 것은?
① 점성이 큰 유류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용수의 유입에 의한 갑작스러운 부피 팽창으로 탱크 내의 유류가 끓어 넘치는 현상
② 저장탱크 속의 물이 점성을 가진 뜨거운 기름의 표면 아래에서 끓을 때 화재를 수반하지 않고 기름이 넘쳐 흐르는 현상
③ 가연성 가스가 연소하면서 바람을 타고 흘러가는 현상
④ 석유화재에서 저장탱크 하부에 고인 물이 격심한 증발을 일으키면서 불붙은 석유를 분출하는 현상
⑤ 과열상태의 탱크 내부에서 액화가스가 분출하여 기화되어 착화되었을 때 폭발하는 현상

3. 응급환자의 평가 중 2차 평가의 단계로 옳은 것은?
① 의식상태 평가
② 활력징후 평가
③ 기도유지 평가
④ 순환 평가
⑤ 이송의 우선순위 결정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긴급구조통제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난현장에서는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이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한다.
② 긴급구조통제단장은 긴급구조지원요원의 현장 출동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시·도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소방본부장이 된다.
④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소방청장이 된다.
⑤ 시·군·구의 소방서에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을 두고 단장은 소방서장이 된다.

5. 고체상태의 연소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셀룰로이드, 트리니트로톨루엔은 분자 내에 산소를 가지고 있어 가열 시 열분해에 의해 가연성 증기와 함께 산소를 발생하여 자신의 분자 속에 포함되어 있는 산소에 의해 연소한다.
② 목재, 석탄, 종이, 플라스틱은 가열하면 열분해 반응을 일으키면서 생성된 가연성 증기와 공기가 혼합하여 연소한다.
③ 유황, 나프탈렌은 가열하면 열분해를 일으키지 않고 증발하면서 증기와 공기가 혼합하여 연소한다.
④ 숯, 코크스, 목탄, 금속분은 열분해 반응에 의한 휘발성분이 표면에서 산소와 반응하여 연소한다.
⑤ 파라핀, 유지는 가열하면 융해되어 액체로 변하게 되고 지속적인 가열로 기화되면서 증기가 되어 공기와 혼합하여 연소한다.

6. 폭굉 현상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파에 필요한 주된 에너지원은 연소열이다.
② 압력상승이 폭연의 경우보다 10배 또는 그 이상으로 크다.
③ 충격파가 음속보다 빠르게 전파된다.
④ 파면에서 온도, 압력, 밀도가 불연속적으로 나타난다.
⑤ 폭굉 시의 온도 상승은 열에 의한 전파보다 충격파의 압력에 기인한다.

7. 물소화약제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물소화약제는 자연으로부터 쉽게 얻을 수 있으며, 저장 및 취급이 용이하고 간단한 조작 및 방법에 의해서 사용이 가능하여 빠른 시간 내에 화재를 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② 물소화약제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열 및 기화열의 값이 다른 소화약제에 비하여 높고, 장기간 저장해도 소화약제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지 않는다.
③ 물소화약제는 제4류 위험물 중 중질유인 중유 화재 시 봉상주수에 의해서 유화층을 형성하여 질식·냉각 및 유화소화작용을 일으켜 신속하게 소화하는 기능을 갖는다.
④ 물소화약제는 화재에 대하여 냉각·질식·유화·희석소화작용과 고압으로 주수 시 화재의 화세를 제압하거나 이웃한 소방대상물로의 연소방지 기능 등 여러 가지의 소화작용을 가지고 있다.
⑤ 물소화약제는 수용성 가연물의 화재 시 소화약제로 이용할 경우 알코올포소화약제와 함께 우수한 소화작용과 소화능력을 발휘한다.

8. 화재 종류에 따른 분류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류화재 - 황색 - B급 화재
② 일반화재 - 백색 - A급 화재
③ 전기화재 - 청색 - C급 화재
④ 가스화재 - 황색 - E급 화재
⑤ 금속화재 - 황색 - D급 화재

9. 분말소화약제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연소 물질에 영향을 끼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② 전기절연성이 높아 고전압의 전기화재에도 적합하다.
③ 제3종 분말소화약제의 착색은 담홍색이다.
④ 자기연소성 물질의 화재에 강한 소화력을 가지고 있다.
⑤ 습기의 흡입에 주의하여야 한다.

10. 우리나라 소방조직에 대한 구분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소방행정조직 - 중앙119구조본부
② 지방소방행정조직 - 서울특별시소방학교
③ 민간소방조직 - 자체소방대
④ 지방소방행정조직 - 소방서
⑤ 중앙소방행정조직 - 의용소방대

11.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소화활동설비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제연설비
② 소화수조
③ 연소방지설비
④ 비상콘센트설비
⑤ 연결살수설비

12. 화재조사 및 보고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상자는 화재현장에서 사망 또는 부상당한 사람을 말하며, 화재현장에서 부상을 당한 후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도 당해 화재로 인한 사망으로 본다.

② 건축・구조물 화재에서 전소는 건물의 입체면적 70% 이상이 소실되었거나, 또는 그 미만이라도 잔존부분을 보수하여도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

③ 화재조사 시 화재의 유형을 건축・구조물 화재, 자동차・철도차량 화재, 위험물・가스제조소 등 화재, 선박・항공기화재, 임야화재, 기타화재로 구분한다.

④ 1건의 화재란 1개의 발화점으로부터 확대된 것으로 발화부터 진화까지를 말하며, 동일 소방대상물의 발화점이 2개소 이상 있는 경우라도 지진, 낙뢰 등 자연현상에 의한 다발화재는 1건의 화재로 본다.

⑤ 동일범이 아닌 각기 다른 사람에 의한 방화, 불장난도 동일대상물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1건의 화재로 한다.

13. 대류(convection)에 의한 열전달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고체 또는 정지 상태의 유체 내에서 매질을 통한 열전달을 말한다.

② 전도현상에 비해 가연성 고체에서의 발화, 화염확산, 화재저항과 관련성이 크다.

③ 원격 발화의 열전달로 작용하고 특히 플래시오버를 일으키는 조건을 형성한다.

④ 열복사 수준이 낮은 화재초기 상태에서 중요한 현상으로 부력의 영향을 받는다.

⑤ 전달 열량은 온도차, 열전도도에 비례하고 물질의 두께에는 반비례한다.

14. 미군정 시대부터의 우리나라 소방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미군정기에 최초의 독립된 자치소방행정체제를 실시하였다.

② 1958년에 「소방법」이 제정되었다.

③ 1970년에 전국 시・도에 소방본부를 설치하였다.

④ 1977년에 국가・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한 단일신분법이 제정되었다.

⑤ 2017년에 소방청이 설립되었다.

15.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5류 위험물의 품명 및 지정수량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① 유기과산화물 – 10 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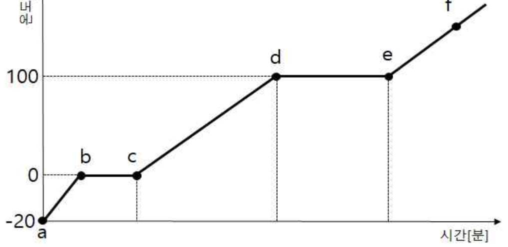
② 질산에스테르류 – 20 kg

③ 니트로화합물 – 100 kg

④ 니트로소화합물 – 100 kg

⑤ 아조화합물 – 300 kg

16. 다음 그래프는 1기압하에서 –20 ℃의 얼음 1 g이 가열되는 동안의 온도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구간 b~c, 구간 d~e에서 잠열을 흡수한다.

② 구간 a~b, 구간 c~d, 구간 e~f에서 현열을 흡수한다.

③ 구간 b~c에서 흡수하는 열량은 약 80 cal 이다.

④ 구간 c~d에서 흡수하는 열량은 약 100 cal 이다.

⑤ 구간 b~e에서 소요되는 열량은 약 619 cal 이다.

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즉시 취해야 하는 응급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응급지원에 필요한 비용부담
②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방역과 방범, 그 밖의 질서 유지
③ 긴급수송 및 구조 수단의 확보
④ 급수 수단의 확보,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의 확보
⑤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1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는 자연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재난복구사업의 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구호 및 재난의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국고의 부담금 또는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의연금 등으로 충당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금품 또는 이를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19. 목조건축물의 일반적인 화재 진행과정으로 옳은 것은?

① 무염착화 - 발염착화 - 화재원인 - 최성기 - 발화
② 화재원인 - 무염착화 - 발염착화 - 발화 - 최성기
③ 화재출화 - 무염착화 - 발화 - 화재원인 - 최성기
④ 화재원인 - 발염착화 - 무염착화 - 최성기 - 발화
⑤ 무염착화 - 발염착화 - 화재원인 - 발화 - 최성기

20.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무창층에 설치되는 개구부의 크기는 지름 70㎝의 원이 내접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지하구란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③ 화재를 진압하는 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를 소화활동설비라 한다.
④ 방열복, 공기호흡기, 공기안전매트는 피난설비이다.
⑤ 옥내소화전설비, 포소화설비, 소화기구, 연결송수관설비 등은 소화설비에 해당한다.

21. 소방공무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방공무원은 특수경력직 공무원이다.
② 소방경 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은 소방청장이 임용한다.
③ 「소방공무원법」상 임용에는 신규채용, 파견, 정직, 퇴직 등이 있다.
④ 소방공무원 중징계에는 파면, 해임, 감봉, 정직 등이 있다.
⑤ 지방소방공무원의 임용권자는 소방본부장이다.

22. 화재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잔가율’이란 화재 당시 피해물의 재구입비에 대한 현재가의 비율을 말한다.

② ‘반소’란 건물의 입체면적에 대한 비율 30%이상 70%미만이 소실된 것을 말한다.

③ ‘조사관’이란 화재조사 업무를 총괄하는 간부급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④ ‘감정’이란 화재원인의 판정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 기술 및 경험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을 말한다.

⑤ 화재현장조사는 주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3. 백드래프트(Back Draft) 현상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화재성장기에 주로 발생하는 급격한 가연성가스 착화현상이며, 충격파는 발생되지 않는다.

② 공기 부족으로 훈소 상태에 있을 때 밀폐된 실내의 축적된 가연성가스가 신선한 공기의 유입으로 인하여 폭발적으로 연소하는 현상이다.

③ 가연성 증기가 연소점에 도달하여 불덩어리가 천장을 따라 굴러다니는 현상이다.

④ 연료지배연소에서 환기지배연소로 급격하게 전이되는 과정으로, 구획 전체로 연소가 확대된다.

⑤ 천장의 복사열로 인해 주변 가연물이 자연발화에 도달하는 현상으로, 이 현상이 발생되기 전에 피난이 종료되어야 한다.

24.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1석유류로 옳은 것은?

① 경유

② 등유

③ 휘발유

④ 중유

⑤ 클레오소트유

25. 연소이론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연물 종류에 따라 연소속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② 작열연소란 열과 빛을 발하는 것으로, 육안으로 보이는 현상이다.

③ 탄화수소화합물의 완전연소 시 생성물은 물과 일산화탄소이다.

④ 연소속도는 온도와 압력이 높을수록 빨라진다.

⑤ 표면연소는 기체 또는 액체 가연물의 전형적인 연소형태이다.